

CSRD 실무 관점에서 “공급망 실사(인권·환경) + 보고(ESRS)

1) CSRD 핵심 정의

- **CSRD(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)**는 EU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(및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EU 기업 등)에게 **ESRS(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)** 기준으로 상세 지속가능성(**ESG**)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. 공시는 이중 중요성(**Double materiality: 재무 중요성 + 영향 중요성**) 기반으로 결정됩니다.
- “공급망 실사”는 법적으로는 **CSDDD(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)**가 직접 규정하는 영역이지만, **CSRD** 하의 **ESRS** 공시가 가치사슬(**value chain**) 전반의 정책·절차·리스크관리·지표를 요구하기 때문에, 실무에서는 실사 프로세스가 없으면 공시를 제대로 못 하는 구조가 됩니다.

2) Impact “높음”인 이유(공급망 기업 포함)

- EU 직접 보고 의무가 없더라도, **EU** 고객사(대기업/상장사 등)가 **CSRD** 공시를 위해 공급망에 데이터·정책·실사 증빙을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됩니다(“value chain information request”가 거래조건처럼 작동).
- 2025~2026년에 EU가 경쟁력 관점에서 범위·일정 조정(유예/축소)을 추진·합의하면서도, “큰 기업과 핵심 공급망” 중심으로는 요구가 유지되는 방향이어서, 공급망 대응 필요성은 계속됩니다.

3) Action: 대응 필요 — Core Action을 “프로세스 + 보고”로 묶는 실행 구조

Core Action

공급망(가치사슬) 인권·환경 실사 대응 프로세스 및 보고 체계 수립

아래는 “실사(운영) → 증빙(통제) → 보고(ESRS)”로 연결되는 최소 실행체계입니다.

4) 실무 로드맵 (90~120일 기준, 바로 적용 가능)

A. 거버넌스와 책임체계 (2주)

1. 오너십 확정: 구매/SCM, ESG, 법무/준법, 품질, 재무, HR을 포함한 태스크포스
2. **RACI**: 공급업체 평가(구매), 리스크 평가(ESG/법무), 데이터·지표(재무/ESG), 공시문안(ESG/IR), 승인(경영진/이사회)
3. 문서 프레임: 정책(Policy) – 절차(Procedure) – 기록(Records) – 개선(CAPA)로 표준화

CSRD는 ‘이중 중요성’을 요구하므로, 거버넌스 단계에서 재무 관점(enterprise value) + 영향 관점(사람·환경)을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.

B. 더블 머티리얼리티(DMA) + 공급망 리스크 스코핑 (3~6주)

1. 가치사슬 맵 작성: 원재료~제조~물류~판매~폐기/재활용까지 “핵심 노드/국가/협력사” 식별
2. **IRO** 도출: 인권(강제노동, 아동노동, 산업안전, 차별 등) + 환경(오염, 수자원, 생물다양성, 기후 등) 이슈를 **Impact-Risk-Opportunity(IRO)**로 정리
3. 중요성 판정(문서화): “왜 중요한가” 근거(사실/사례/규제/노출도/이해관계자)를 남김

DMA는 CSRD/ESRS 보고 범위를 결정하는 ‘게이트’입니다. DMA가 약하면 공시 리스크(누락/과소 공시)가 커집니다.

C.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구축 (6~10주)

실사는 “정책 선언”이 아니라 반복 운영 가능한 프로세스가 핵심입니다. (EU의 실사 지침(CSDDD)도 ‘식별-예방/완화-모니터링-시정-소통’ 성격을 요구)

1) 공급업체 분류 & 우선순위

- 리스크 기반 세그먼트: 국가(인권/환경 위험), 공정(유해화학/고위험), 거래규모, 대체가능성
- 결과: Tier1만 보지 말고 고위험 품목은 **Tier2+** 정보요청 루트 마련

2) 실사 도구(최소 세트)

- **Supplier Code of Conduct**(인권·환경·윤리) + 계약조항(감사권, 시정요구, 해지조건)
- **Self-Assessment Questionnaire(SAQ)**: 증빙 요구(허가증, 교육, 사고기록, 임금/근로시간 등)
- **On-site/Remote Audit** 기준: 고위험 우선
- **Grievance/제보 채널**(내부·외부 이해관계자) 및 처리 SLA

3) 시정조치(CAPA) 운영

- “부적합 발견 → 원인분석 → 개선계획 → 기한 → 재검증”을 표준 프로세스로 고정
- 중대 사안은 거래 중단/개선 로드맵 분기 규칙을 사전 정의

D. 보고(ESRS) 체계 설계 (동시 진행)

CSRD 공시는 ESRS 프레임에 맞춰 정책/목표/조치/지표/성과를 일관되게 연결해야 합니다.

- 공시 데이터 레이어
 - 정책/절차(실사 체계 설명)
 - 리스크 평가 결과(우선순위·범위)
 - 조치 및 성과(감사, 교육, 시정조치)

- 지표(KPI) 및 목표(Target)
- 증빙/내부통제
 - 데이터 출처, 변경이력, 승인기록, 표본 점검(감사 대응)을 남김
 - 향후 제한적/합리적 보증(assurance)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“감사 가능한 형태”로 저장

(이중 중요성·가치사슬 정보 요구 흐름은 EU 공식 자료 및 EFRAG 가이드스에서 강조됩니다.)

5) 최소 산출물(Deliverables) 체크리스트

(1) 프로세스

- 공급망 실사 정책 + 공급업체 행동규범 + 계약조항(감사권/시정/해지)
- 리스크 기반 공급업체 분류체계 + 평가/감사/시정 프로세스(RACI 포함)
- 제보/고충처리 채널 및 처리 기록

(2) 보고/데이터

- DMA 문서(가치사슬 범위·IRO·중요성 판정 근거)
- 공급망 KPI 세트(감사율, 고위험 커버리지, CAPA 완료율, 교육 이수 등)
- 증빙 바인더(Records) 구조 + 버전/승인 로그

6) 일정·범위 변동(2025~2026 단순화/유예) 대응 팁

- 최근 EU는 CSRD/CSDDD에 대해 유예(Stop-the-clock) 및 단순화/범위 조정을 추진·합의해 왔고, 2026년 2월에도 관련 약화/축소가 최종 승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

- 따라서 실무는 “법 적용 대상 여부”만 따지기보다, **EU** 고객사의 데이터요청(공급망 압력)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
 1. 고위험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
 2. 보고용 데이터·증빙 체계를 경량 **MVP**로 먼저 구축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.